

불체포 특권 포기...방탄국회 사라진다

정치발전특위, 중복수당 폐지 등 7가지 개혁안 통과

일부 이르면 연내 적용...친인척 채용제한은 결론 못내

이르면 올 연말부터 국회의원의 대표적인 특권으로 꼽혔던 불체포 특권과 국무위원 겸직시 중복수당, 민방위대 편성 제외 등의 특권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는 19일 불체포 특권 포기, 40세 이하 의원의 민방위 편성 등 7가지 개혁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 제한 문제에 대한 논의가 갈려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치발전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권한 개혁, 선거제도 개혁, 국회 운영제도 개선 등 3개 소위원회에서 그동안 논의된 결과를 보고받았다.

우선 특위는 국회의원의 대표적 특권으

로 지목받은 불체포 특권을 개선하기로 뜻을 모으고 의원 체포동의안 접수 후 72시간 내 표결되지 않을 경우 다음번 본회의에 의무 상정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또한, 만 40세 이하 남성 국회의원은 민방위에 편성되도록 했으며, 국무위원을 겸직한 의원에게 현재 일반수당만 지급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는 임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도 주지 않도록 했다.

이 외에 ▲의사일정 작성기준 도입 ▲대정부질문 오후 2시 개최 등 제도 개선 ▲헌법재판소 위원 결정에 대한 국회 후속절차 마련 ▲국민의 정원권 보장 및 정원 심사 절차 개선 등 소위에서 결정된 사항에 합의했다.

그러나 친인척 보좌진 채용 문제는 소위에서 제기된 세 가지 방안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친인척의 채용을 원천 금지하는 안과 친인척 채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경력·자격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안, 1인 이내에서는 친인척 보좌진 채용을 허용하는 안 등이다.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은 “친인척을 심사·평가하는 안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느냐 하는 의문이 들고, 만약 심사한다면 객관성을 어떻게 담보하느냐에 대한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객관적인 경력·자격을 갖춘 경우 친인척이라는 점 때문에 배제하는 건 온당치 않다”고 주장했다.

선거제도 개혁을 다루는 제2소위는 선거운동 자유 확대와 선거구제 개편 등 32개 과제를 선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 등의 개정 논의를 본격화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이밖에 국회운영 개선과 관련한 제3소위는 8월 임시국회(16~31일) 소집을 명문화하고,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개최 요일과 시간을 특정해 의사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 등을 사실상 확정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오늘 논의된 방안은 법제화 작업을 거쳐 다음달 19일 전체회의에서 확정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충분히 논의하지 못한 의제들은 소위별로 다시 회의를 열어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회 관계자는 “대부분이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수는 올 정기국회에서 입법 작업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크지만 일부는 이르면 올해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安 “양극단 제외 대선주자들과 조건 없는 경쟁”

성남 방문...“목표는 집권...文, 지난 대선 패배 죄지어”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19일 “양극단을 제외한 합리적인 개혁에 동의하는 모든 분이 함께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어떤 조건이든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국회 미래일자리 특위의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방문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총선의 민심은 제3지대의 주인으로 국민의당을 만들어 준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안 전 대표는 “제3지대가 국민의당이란 전제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제 목표는 국민의당이 집권당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안 전 대표가 제3지대에서 비박(비박근혜)·비문(비문재인) 대선주자들과 조건 없는 경쟁을 펼치겠다는 의사를 밝혀 반 발짝 나아간 듯 하면서도, 국민의당이 제3지대의 중심이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안 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이 CBS 라디오에서 “이번 대선에서 단일화가 안 된다면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야당 전체가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오히려 지난 대선의 패배가 역사에 죄를 지은 것 아니겠는가”라며 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해 재차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안 전 대표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와 관련, “대북제재를 보다 실효성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가진 유일한 협상카드가 사드”라며 “중국이 실효성있는 대북제재에 참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사드를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협상카드를 갖고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오늘부터 대정부 질문...사드·공수처 등 공방 예고

4일간 국감 전초전 돌입

안보·민생 주도권 싸움 예상

제20대 국회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은 20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21일 외교·통일, 22일 경제, 23일 교육·사회 분야까지 나흘간 실시된다.

정당별로 새누리당 20명, 더불어민주당 20명, 국민의당 8명,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 등 모두 50명의 의원이 나선다.

새누리당은 북한의 5차 핵실험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등의 여파로 안보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또 경제 분야에서는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규제개혁특별법·규제프리존특별법 등 이른바 경제활성화법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게끔 야당이 협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 계획이다. 교육·사회 분야에서는 지난 12일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리히터 규모 5.8 강진과 관련해 사전 예측부터 사후 대책까지 종합적인 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을 할 예정이다.

더민주주는 이번 대정부질문을 국정감사의 전초전으로 삼아 분야별로 굵직한 이슈를 짚어내며 정부의 실정을 추궁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국감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다루겠다는 전략이다.

정치 분야에선 어려운 민생과 북핵 실험을 거론하며 정부의 정책 실패를 부각할 계획이며 외교·안보 분야에서 사드 문제를 놓고선 군사적 차원의 반대보다 외교에



건배할 땐 한목소리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20대 국회의원 환영리셉션'에서 여야 대표들이 건배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심상정 대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국민의당 주승용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대행. /연합뉴스

실패했다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 분야에선 법인세율 인상과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 등 더민주의 주요 공약을 제시하고, 쌀값 폭락에 대한 정부의 대응 미비를 질타할 예정이다.

국민의당 주승용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대행은 19일 비대위 회의에서 “실력 없이 목소리만 큰 야당이 아니라 정책과 대안을 제

시하는 유능한 야당의 모습을 보일 것”이라며 “제3당의 위상을 확고히 정립하고 수권정당의 면모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정치 분야 질문에서는 범조바리의 심각성을 거론하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을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외교·통일·안보 분야 질의에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사실상 사문화

됐다고 지적한 뒤 우리나라도 핵무기를 통한 자위(自衛)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 분야에서는 윤영일 의원이 울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라남도 일대 어패류가 집단 폐사한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다. 광주·전남지역 의원으로는 윤 의원 외에도 이용주·최경환 의원 등이 나선다. /박지경기자 jkpark@

주승용 “北 수해 복구 지원...대화 모색해야”

국민의당 주승용 비상대책위원은 19일 북한의 대규모 수해 피해와 관련, “북한의 수해복구 지원 등 인도적 지원을 통해 대화의 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 방문 중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직무대행하고 있는 주 비대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북한의 수해복구 지원 등 인도적 지원을 통해 대화의 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 비대위원은 “정부는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 추가제재를 위해 움직이고 있으나 국민은 제재효과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면서 “전략적 이해관계를 가진 중국의 적극적 동참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전국 학교 건물 10곳중 1곳 화재 무방비”

송기석 “샌드위치 패널 개선책 세워야”

전국의 초중고 및 대학 건물의 약 10곳 중 1곳은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졌으며, 고정식 소방시설도 없어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송기석 의원(국민의당)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대학 전체 건물 7만167동 가운데 샌드위치 패널 건물은 7645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7645개소 가운데 교사 1407개소, 급식소 711개소, 체육관 302개소, 기숙사 135개소, 강당 94개소 등 교육용 시설이 2649개소였으며 나머지는 창고, 경비실 등 비교육용 시설이었다.

특히 스프링클러나 소화전 같은 고정식 소방시설이 설치된 곳은 7645개소



가운데 1627곳으로 21.3%에 불과했다. 스티로폼을 내장제로 사용하는 샌드위치 패널은 주로 창고 등 조립식 건물에 사용되는 건축자재로, 화재 발생시 불이 쉽게 타고 유독 가스가 나와 인명 피해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송 의원은 “지난해 의정부 아파트 화재 참사 당시에도 샌드위치 패널 때문에 피해가 컸다”며 “학생들이 직접 사용하는 샌드위치 패널 교육시설에 즉각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철거 후 개선 대책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최권열기자 cki@kwangju.co.kr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자금대출 대방출

자영업자를 위한 햇살론이 희망을 드립니다

- 대상자 : -3개월이상 영업중인 사업자
 - 연소득 4,000만원 이하로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자영업자
 -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3,0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 대출한도 : 최대 2,000만원 (창업자금 5,000만원)
- 대출금리 : 4.7% ~ 4.9%
- 대출기간 : 5년(1년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정책자금 1,000억원 한도내 선착순 마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

주유소사업소 720-2800

